

언론브리핑 (2003. 10. 6)

參考資料

政府 合同 調査團

順 序

□ 概 要	1
□ 現 地 情 勢	2
□ IRAQ 統治機構 動向	3
□ 安 定 化 作 戰 狀 況	4
□ 安 全 性 判 斷	5
□ 主 要 人 士 對 談 結 果	6
□ 結 論	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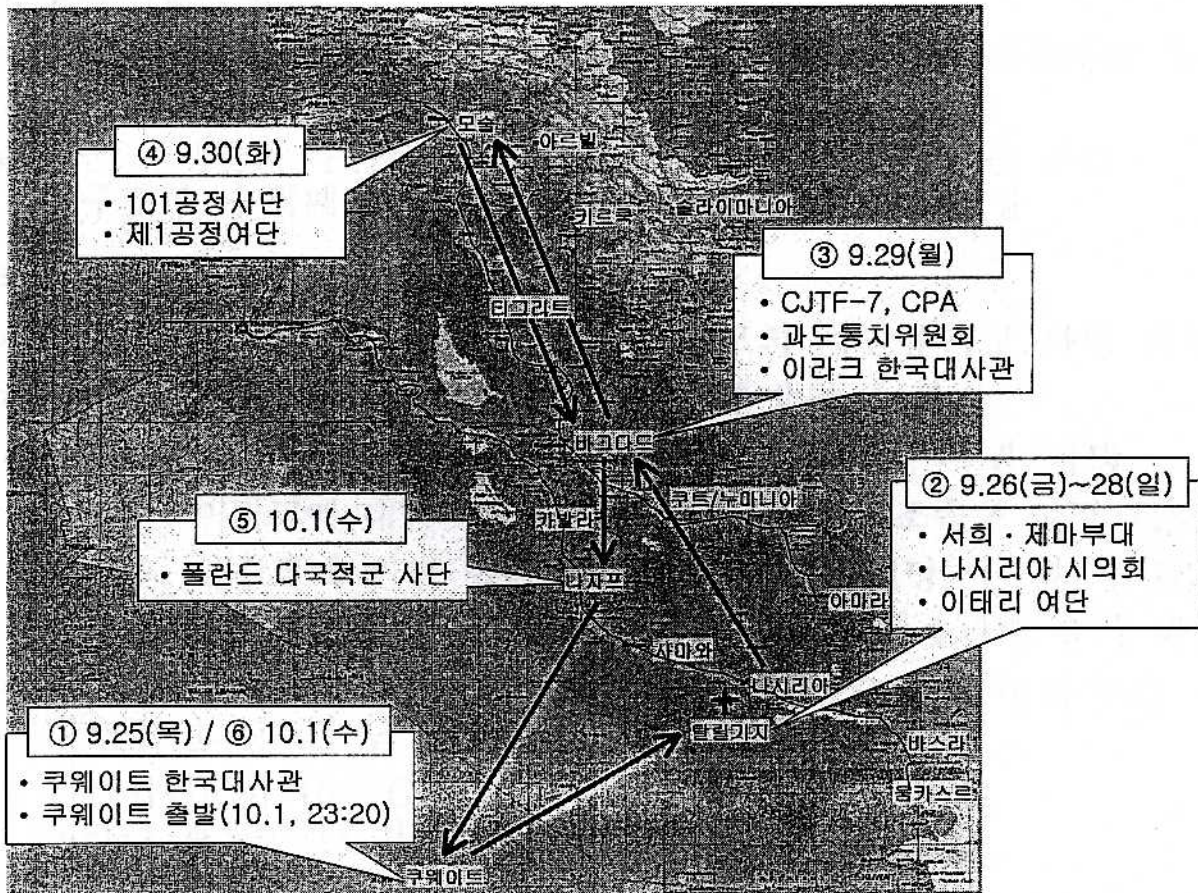
概 要

□ 조사 기간 : '03. 9. 24 ~ 10. 3 (9박10일)

□ 인원 : 단장(정책기획차장)외 11명

* 국방부 6, 외교부 등 관련부처 / 민간전문가 6

□ 방문 지역



□ 조사 중점

-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현지 정세 | ② 이라크 통치기구 동향 |
| ③ 안정화 작전 상황 | ④ 안전성 판단 |
| ⑤ 주요인사·주민 대담 | |

現 地 情 勢

□ 일반 동향

- 전쟁 직후에 비해 경제여건 점진적 개선
- 방송, 언론, 통신 등 사회·경제 기간시설 복구 중
- 현 원유개발은 전쟁이전의 80%수준으로 생산 중
- 종파·민족간 대립으로 인한 내부갈등 가능성 내재

□ 이라크 내부정세

- 테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, 치안질서는 점차 개선되는 추세
- 경제난으로 인한 사회 불안요인 및 위협세력 상존
- ※ 미군·동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철수시 치안혼란을 우려, 민주정부 수립때까지는 한시적 주둔의 필요성을 인정

□ 주변국 입장

- 터 키, UN 결의안 채택시 1만명 규모의 치안유지군 파병 희망
- 시리아, 외국테러 세력의 이라크 침투방지 노력
- 사우디, 舊후세인 정권복원 강력 반대, 동맹국 지원 희망
- 요르단, 이라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, 이라크의 조속한 안정 희망
- 이 란, 다수결에 의한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 희망(시아파 약 60%)
- 쿠웨이트, 사담정권 붕괴후, 친미정권 이라크와 우호관계 유지 희망
- ※ 치안질서 확보를 위한 동맹국 역할 평가, 조속한 이라크의 합법적인 정부수립 희망
- ※ 걸프협력이사회(GCC : Gulf Cooperation Council),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 대표권 인정

□ 동맹군에 대한 태도

- 기본적으로 미·영군에 대한 점령군으로서의 인식 및 외국의 영향으로부터 조기에 탈피하기를 희망
- 국내 치안이 확보되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외국군의 건설적 역할 필요성은 인정
- 대부분 이라크인은 점령군이 아닌 지원군으로서의 동맹군 역할을 기대
-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및 지금까지 한국군이 수행해 온 인도적 지원 및 재건복구 노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

이라크 統治機構 동향

□ 연합 임시행정처(CPA)

- 이라크의 합법정부 수립시까지 최고통치기구로서의 역할 담당
* 석유, 행정, 경제, AID(USAID), 치안, 공보 등 7개국으로 구성
- 과도통치위원회와 협력하여 과도내각 수립, 헌법제정위원회 구성 등 이라크 공식정부 출범 추진
- 이라크 재건을 위해 '03년 31억불, '04년에 200억불을 투입
- ※ CPA는 이라크 석유판매 수입, 미국의 무상지원, 마드리드 원조 공여국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 등으로 2004년도 이라크 재건복구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

□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(IGC)

- 총 25명으로 구성(시아파 13, 수니파 5, 쿠르드5, 투르크만 1, 기독교 1)
- 민주국가 건설을 위해 각 집단간 최대한의 자제와 협조를 모색
-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CPA와 협력하면서 국제활동을 강화
- 국민의 대다수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를 지지
- 주권국가로서 외국군대의 주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천명 불구, 치안유지를 위해 당분간은 외국군 주둔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

※ 이라크 정치발전 7단계

('04년 말까지 이라크인에 대한 신정부 구성을 목표로 추진중)

- ① 과도통치위원회 구성(7. 13) ② 헌법제정위원회 설립준비위 발족(8. 13)
- ③ 과도내각 수립(9. 1) ④ 헌법제정위원회 설립 및 헌법 기초
- ⑤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채택 ⑥ 총선 ⑦ 신정부 구성

안정화 作戰 狀況

□ 군사작전

○ 현 작전개념 : 경계 및 안정화 작전(Security and Stabilization Operation)

구분	Security	Stabilization
개념	· 군사위주 작전	· 민사위주 작전
목적	· 적대세력 근절	· 민생안정 지원
활동	· 후세인 정권 추종세력 제거 · 反동맹군 세력 제압	· 치안·질서 유지 · 주요 기간산업시설 복구

미군 전투부대

⇒

CPA, 동맹군 민사부대

○ CJTF-7(동맹군 사령부)는 이라크 18개 행정구역을 4개 지역으로 구분, 책임지역 부여

* 북부/중부(미군 4개사단), 중남부지역(폴란드사단), 남동부(영국사단)

※ 미군은 후세인 잔적소탕, 테러 및 적대세력 퇴치에 중점을 둔 전투위주 작전 실시, 동맹군은 유류밀매, 범죄조직 소탕에 중점을 둔 치안유지 위주 작전 및 책임지역내 미군작전 지원

□ 민사작전

○ 목 표 : 연합 임시행정처(CPA)활동 지원

○ 주요활동 : 치안질서 유지, 민간단체 활동 지원, 정부기능 발휘 보장, 경제재건 지원

○ CJTF-7 : 예하에 352 민사사령부(4개여단, 9개대대, 1,676명)를 운용

* 동맹국 임시통치기구(CPA)와 상호지원 및 협조

○ 지역 담당 사단에 1개 민사여단 지원

* 지역 협조단(RCG), 지방재건단(PRT)과 협조

* 다국적군 사단은 구성국가별 민사부대 운용

○ 지역별 CPA 자금 배정은 미군 민사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미군사단에 집중(현재까지 7,900만불 투입)

○ 지역별 민사작전 성과(美側 판단)

· 치안질서 : 중부 → 제한, 기타 지역 → 정상

· 민생관련 수준 : 전지역 → 제한, 경제수준 : 전지역 → 보통

安全性 判斷

□ 위협요소

- 적대 세력의 공격 및 테러 행위
 - 바트당 조직원 및 군·경찰·민병대 잔여세력, 외부로부터 유입된 과격 이슬람 세력의 테러 활동
- 종파(시아파·수니파) 및 종족(아랍족·쿠르드족·투르크만족) 갈등
- 경제난으로 인한 민생 범죄

□ 분 석

- 범죄의 72%가 일반 범법행위이며, 28%가 동맹군에 대한 공격행위
- 對동맹군 적대행위의 약 75%가 후세인 지지세력의 집중 거주지역인 “수니 삼각지대(바그다드-라마디-티그리트)”에서 발생
- 바그다드를 포함한 중북부지역, 적대행동이 가장 빈번 및 증가 추세
- 중남부/남부 및 북부지역, 최근 동맹군에 대한 적대행위 감소
- 미군을 제외한 다국적군에 대한 테러는 미미함.
- 종전 후(6~9월), 동맹군의 사망자 수는 총 67명이며, “수니 삼각지대”에서 65%인 43명이 사망
 - * 전쟁 직후인 5월에 집중피해 발생(106명)

□ 평가 결과

- 바그다드를 포함한 중부 지역과 티크리트 일대의 중북부 지역은 최근 적대세력의 공격 빈도가 증가, 불안정한 상태로 평가
- 중남부 및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수준
- 북부 지역은 현재 적대행위 및 치안질서 면에서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, 종족간 갈등으로 분쟁의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음.

主要人士 對談 결과

□ 미군·동맹군 : 동맹군 사령부(CJTF-7), 101공정·폴란드·이태리군

- 바그다드는 저강도 공격작전, 북부와 남부는 안정화 작전에 주안을 두고 시행 중
 - 중남부지역, 군사작전 임무 현저히 감소, 재건지원 소요 증가
 - 북부지역, 비교적 안정, 쿠르드족 자치구는 민사작전 요소만 운용
 - 중부지역, 종전 이후 적대행위의 대부분 발생, 소탕작전 지속 중
- 대규모 추가파병 예상국은 터키, 파키스탄, 방글라데시 등으로 판단

□ 이라크 통치기구 및 주민대표

: 연합 임시행정처(CPA),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(IGC), 모술주민 등

- 치안은 안정화 추세, 8월 이후 테러 발생빈도는 점차 감소
 - 범죄 발생률 증가에 경제 및 실업난에서 기인, 고용창출 노력이 중요
- 기본적으로 IGC는 동맹군의 조기 철수를 희망하나, 현재 치안상태하에서는 외국군 주둔이 불가피함
- 이라크 재건우선 순위 : 치안회복 → 경제재건 → 공공서비스 제공 순
- 원유 매장량이 많으나 개발이 되지 않아 빈곤하게 사는 것에 대한 불만 팽배
- 한국군이 학교/병원 보수, 일자리 제공 등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 준다면 테러는 없을 것임

結 論

□ 동맹군의 안정화 작전으로 이라크는 전반적으로 안정화 단계로 진입, 현재는 군사작전보다는 치안·질서유지 및 재건지원에 주력

□ 이라크 국민은; 미군·동맹군의 주둔을 반대하면서도 치안확립때까지 주둔을 인정하는 이중성 견지

□ 동맹군 임시행정처(CPA) 주도의 경제 재건 및 이라크 자치행정 능력 구축작업이 순조롭게 진행

□ 안전성 판단 결과, 바그다드를 포함한 중부·중북부는 불안전, 이라크 북부와 남부는 안정화되어 테러의 위험성이 점차 감소 추세.

※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 경주